



민원기 ITU전권회의 의장(미래창조과학부 국장)

“IT 외교 위상 높이고 국제사회 진출하는 좋은 계기 될 것”

글_김한별 중앙일보 기자 idstar@joongang.co.kr

올해 과학기술계에는 유독 굵직한 국제행사가 많다. 8월 세계수학자대회(IMC),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IMC가 학계의 축제라면 ITU전권회의는 국가 행사다. IMC에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수학자들이 모인다면, ITU전권회의에는 193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다. 때문에 IMC는 민간 주도로 준비 중인 반면, ITU전권회의는 정부가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지난 달 21일 ITU전권회의 의장인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국장을 만나 넉 달여 남은 회의 준비상황을 물었다. 민 의장은 연세대 사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워싱턴대 MBA를 졸업했다. 1989년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협력기획담당관, 중앙전파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재직 중 OECD 정보통신서비스정책분과의장을 맡고 UN(APCICT)·월드뱅크에서 파견 근무를 한 ‘국제통’이다. 지난해 의장 지명 전까지는 미래부 초대 대변인으로 일했다.

Q. 요즘 미래부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꼽힌다(웃음).

A. 한 달의 반은 한국에서, 반은 외국에서 지낸다. 이틀 전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시차적응이 안 돼 힘들다(웃음). 회의 참가국이 6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지역별 안건이 다 다르다. 각각의 회의에 최소 1번 이상 참석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출장도 많다. 다음 달만 해도 UN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 OECD,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회의가 이어진다.

Q. 한국에 있을 때의 일과는?

A. 하루종일 회의 ‘공부’를 한다. ITU 전권회의는 193개국 대표가 참여해 3주에 걸쳐 진행된다. 지역별 분야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중재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의장으로서 회의 운영 스킬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직원 중에 캐나다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아침 회의는 항상 영어로 한다. 특히 ITU 회의 땀 일상 회화에선 잘 쓰이지 않는 문어체 표

현이 많이 쓰인다. 그런 표현은 입에 붙지 않으면 잘 안 나오니까 계속 연습을 한다(의장실 한편의 칠판에는 'in earnest'(본격적으로), 'clinch a deal'(확정되다), 'semantic conundrum'(혼란스럽다) 같은 영어 표현이 줄줄이 적혀 있다). 자문단 교수님을 모실 때도 영어로 발표를 부탁한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는 불어 공부도 한다. 전권회의 때 임원을 선출하는데 결과 발표를 불어로 하는 게 관행이라서다.

Q. OECD·월드뱅크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국제회의의 진행이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

A. OECD에선 정책분과 의장을 했고 월드뱅크에선 개발도상국 관련 일을 주로 했다. 193개국이란 일하는 것은 처음이다(웃음). 더구나 ITU 전권회의에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세계 모든 국가의 이해가 분출된다. 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새로운 이슈가 계속 생겨난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기 힘들다.

Q. 현재 준비 상황은.

A. 반환점을 돌았다. 회의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목표로 한 것이 과거 회의 의사록과 비디오 클립을 통째로 보는 거였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지 기본 콘셉트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2006년과 2010년 것을 다 봤다. 두 번째로 사회를 보려면 각국 대표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그간 열심히 회의에 참석해 이제 대부분의 사람과 편하게 이름(퍼스트네임)을 부를 수 있게 됐다.

Q. ITU 전권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

A. ITU는 내년에 설립 150주년을 맞는다. 모(母)기구인 UN보다 더 오래된 기구다. 주파수·위성궤도 배분 등 무선통신규칙을 정하고 관련 표준을 정하는 게 주기능이다. 여기에 개도국 ICT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ITU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가 전권회의다. 모든 국가가 4년에 한 번씩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향후 ITU의 운영방안과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진다. 쉽게 말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주총'이라고 보면 된다.

Q. 한국 개최의 의의를 평가한다면.

A. ITU전권회의는 4년에 한 번씩 6대주를 돌아가며 열린다. 아시아에선 20년 전 일본 교토에서 열린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중국·호주도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 그만큼 IT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우리는 IT시장은 선점했지만 외교에선 늘 뒤에 있었다. 선진국들이 의제를 내면 대응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유치하며 외교에서도 전면에 나서게 됐다. 우리가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사회를 보는 의장국이 됐다. IT외

교에서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Q. 우리는 어떤 의제를 제안하나.

A. 사물인터넷(IoT), 의료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정보보호 세 가지 의제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제안은 거의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퍼시픽텔레커뮤니티(APT)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을 하고 다른 국가들이 피드백을 주면 보안해 제출하게 된다. 최소 2가지 이상은 채택될 거라 기대한다.

Q.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도 관심사다

(※2012년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이후 중국·러시아·개도국 등은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은 현재처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무척 뜨거운 이슈다. 공식적으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Internet related public policy issue)'란 표현을 쓴다. 의장으로서는 193개국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도록 노력할 거다. 합의가 도출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절충점을 찾는 게 의장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본 회의 말고 다른 행사는?

A. 본 회의만 2번이고 그 외 그룹 미팅, 비공식회의 등이 이어진다. 월드 IT쇼,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이 준비하는 컨퍼런스 등도 있다. 회의의 공식 참가자가 3천 명이지만 각종 전시 참석자 등을 합하면 30만 명쯤 될 거다. 회의 장소인 부산의 해외 홍보 효과가 클 거다. 특히 ITU 전권회의는 개최국이 아니라 개최도시 이름이 불리는 게 특징이다. 2006년 회의는 안탈라(터키) 전권회의, 2010년은 과달라하라(멕시코) 전권회의라고 불렸다. 올해 대회도 앞으로 계속 부산 전권회의로 불리게 된다. 부산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이벤트와 전시회(Events&Exhibition) 사업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거다.

Q. 한국의 과제는.

A. 이번 ITU 전권회의는 1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 이번 회의를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ITU나 ICCAN 등에 한국인 직원이 더 많이 일하게 되길 바란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번에 아프리카 대표들이 많이 온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정부가 바이어다. 우리 기업들이 전권회의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시회·컨퍼런스 등을 많이 열려고 한다. 